

“헌법 준엄함으로 국민에 응답...도덕적 가치 되찾자”

“尹 단죄로 헌정질서·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 탄압을 위해 단전·단수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두번째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는 더 치밀하고, 공격적인 계엄이자 내란이 될 것이다. 현재는 윤석열을 단죄해 독재를 꿈꾸는 자들에게 헌법의 준엄함을 행사해 역사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가 부디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헌법정신으로 국민의 뜻에 응답하길 바란다. 반드시 윤석열이 파면돼 이 땅에 민주주의가 바로서길 기대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함에 따라 파면 때까지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도 무너졌다. 현재가 만약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대표적 위험 사항인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 1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공인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이 마음껏 해집어놓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전례까지 남기게 될 것이다. 정권의

“尹 파면,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선 될 것”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결국 탄핵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우리 앞에 놓이게 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민생은 뒷전이 됐다. 그동안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를 지키기 위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와 광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출퇴근 길에는 매서운 바람에 맞서 피켓을 들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원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가 쓰러져 끝내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온 모든 이들의 눈물과 절규가 응축된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촉구를 외치는 간절함의 맞은편에는 윤 대통령을 수호하려는 극우 집회가 세를 과시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는 젊은 얼굴들이 늘어 우려감을 더했다. 이념의 진심이 아니라, 상식의 붕괴가 진심이 되어버린 사회가 돼 버렸다. 그것이 지금 맞서야 할 ‘진짜 위기’다. 당장은 분명 어두운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희망의 마법을 외운다. 윤석열의 파면은 곧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상식이 바로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이 되리라 길게 믿는다.

“법과 정의, 상식과 진실 위해 헌재 인용 결정을”

노영필 교육평론가



대를 불러올 것이다. 법과 정의, 상식과 진실을 지켜주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헌재는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거짓과 억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질되고, 미래 세대는 도덕과 진리를 따지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닌 우리의 교육적 토대와 사회적 근본을 뒤흔들어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중차대한 문제다. 아이들은 단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이라는 더 큰 교과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기각이 되는 순간 부정한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희대의 사건이 된다. 거짓과 폭력, 불법과 반칙, 망상적 권위주의가 수개월 동안 극심한 사회 혼란을 불러왔는데 어찌 수습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공익적 담론과 도덕적 가치판단을 사라지고 정의의 상식은 나라에 떨어질 것이다. 결국 기각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올바른 가치관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계엄사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절멸의 시

“경제위기 심각...기업 지원정책 가로 막혀”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불확실한 정국으로 고환율과 미국 트럼프 발 고관세, 예산 집행이 막혀버린 기업 지원 정책 등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대한민국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해 우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환차손 발생과 고환율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중소 규모의 IT 기업을 제외하고 지역 제조 기업들은 폐업에 가까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현재 생산 제품을 해외로도, 해외 제품을 국내로도 들여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환율 안정화, 외교 정상화 등이 시급하다. 최악의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정국 혼란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대출 지원과 R&D사업 등 공격적인 기업 살리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는 시간도 중소기업들에겐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된 경제 침체로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내란 농정에 사라진 농업민생예산 복원을”

강제석 전남새농민회장



은 축소하고 재해복구비도 1200억원이나 삭감했다.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농민들의 가구당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3만원에서 2023년 2678만원으로 10.5% 폭등한 반면 평균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약 14% 줄었다. 당장 사용해야 할 무기지 비료 값은 지난해 말보다 현재 5.9% 상승했으나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돼 농민들이 고스란히 가격부담을 안게 된 상태. 기후재난시대 사시사철 재해가 닥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탄핵시켜 농업민생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내란 농정 속 사라진 농업민생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동안 농민들의 어려움을 그나마 경감해 주던 농업민생예산들이 대폭 축소돼 농민들은 한해 영농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비료값의 20% 정도를 보전해 주던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농민들 부담이 1년새 25% 늘었다. 농산물 가격조차 직접 정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올게 뻔하다.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졸속 확대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늘리며 기존 재해보험예산

“현명한 결정으로 국가 시스템 회복해야”

변재훈 전남대민주동우회 집행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각종 행정 사업이 중단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공공서비스 제공이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 혜택을 기다리는 취약계층, 행정 처리를 기다리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구속이 취소된 것만 보더라도, 법적 판단이 늦어지면

서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려야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지쳤다.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용납될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만이 혼란을 끝낼 수 있으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현재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현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국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일상서 문화 즐기는 나라를”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으나 우리는 훨씬 낯설기니 버티면 된다. 수많은 선언을 통해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 게 성과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계엄이라니, 자충수다. 결국 스스로 내려오는 꼴이다. 본인과 측근의 욕망으로 정치를 하고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 어딘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돼야만 한다.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아름다운 나라, 이제는 만들 때 되지 않았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집권한 지난 3년간 영화인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여성으로 수많은 선언에 참여했다. 하루아침에 영화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스태프까지 뽑아 준비하고 있던 영화제가 한순간 폐기됐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 영화 예산이 없어졌다. 지역이라는 개념과 이해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지역에서 영화를 왜 만드냐고 묻는 격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최근 10년 중 가장 낮다. 문화예술 강국이라 떠들지만, 정작 이에 걸맞은 지원은 없다. 영화인들은 언제부터가 자조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임기가 있

“내란·외환죄...尹 탄핵·처벌 이유 차고 넘쳐”

나규복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전까지 드러난 수많은 범죄 사실과 친일·친미 매국 행태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란죄와 외환죄다. 내란죄와 관련된 증거들은 현재 연일 폭로되고 있다. 계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국회 장악과 의원 체포 지시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감행했다. 외환죄의 실체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뚜렷하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북한을 자극했고,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오물 풍선이 날아

오는 곳을 원점 타격할 것을 검토하고 지시했다.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삼은 것이다. 윤석열은 탄핵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만을 탐한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또한 내란을 공모한 세력들 역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윤석열 탄핵은 필수적이며 필연적이다. 나아가 외환을 기도한 모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시도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민주주의가 승리한다.